

보도설명자료

('22. 1. 19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는 탈석탄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,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'백스텝'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

(1.19일 세계일보 「脫석탄 아닌 減석탄...정부 탄소중립 정책 '백스텝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보도 내용

- 10차 전기본 계획기간 동안 정부의 탈석탄 정책 기조가 후퇴했으며, 정부 탄소중립 정책이 '백스텝'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'30년 석탄발전 비중 19.7%'는 9차 전기본 (29.9%) 및 NDC 상향안(21.8%) 대비 대폭 축소하여 탈석탄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,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

< 2030년 석탄 발전량 비중 전망 (단위 : TWh) >

구분	'18년	'30년 전망		
		9차 전기본	NDC 상향안	10차 전기본
발전량	239.0	175.1	133.2	122.5
비중(전체 발전량 대비)	41.9%	29.9%	21.8%	19.7%

- '3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 비중을 지속 감축('36년 석탄발전 비중: 14.4%)하며, '36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석탄발전소 28기(14.1GW)를 폐지할 계획임
- 또한, 향후 석탄발전에 암모니아 20% 혼소발전을 추진하여,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

- 우리나라와 전력수급 여건이 비슷한 일본도 '30년 석탄발전 비중은 19% 수준이며(에너지 기본계획, '21년), 석탄발전과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
- 또한 최근 전세계 에너지 위기로 인하여 독일, 영국 등 유럽 국가들도 폐지 또는 휴지보전 했던 석탄발전을 재가동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
-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, 전력수급의 안정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,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임

※ 문의 : 전력산업정책과 강감찬 과장(044-203-3880)
이우진 사무관(044-203-3881)